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서 소수자운동과 촛불의 만남

●
나라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년 겨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정권퇴진 운동은 엄청난 규모의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압도적인 규모의 대중행동은 커져이 쌓여온 분노의 크기를 보여줬다. 정권퇴진 운동은 갑툭튀가 아니라 끈질긴 저항 속에 쌓여온 불만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국가 폭력으로 인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 노동개악에 맞선 저항,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한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 등이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진 길에 놓여있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악행이 다종다양하고, 한국 사회 지배구조의 뿌리 깊은 문제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많은 쟁점들이 운동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소수자 운동, 그리고 소수자 운동이 제기해 온 문제의식도 촛불의 일부였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크고, 운동 안에서 이런 이질성과 다양성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낯설고 문제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 안에도 여전히 성차별적/소수자혐오적 태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거나 ‘촛불’과 ‘소수자 운동’을 대립각으로 보는 시각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운동은 단순히 다양한 목소리의 총합이 아니다. 다양한 요구들을 관통하며 하나의 광장을 연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지금 운동은 ‘민주주의’와 ‘국가’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늘날 소수자 인권이 ‘민주주의’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이는 그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소수자 혐오와 극우 정치의 부상, 세계적인 현상이다.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긴축과 소수자 집단을 향한 책임돌리기가 횡행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혐오가 사회적 키워드로 떠올랐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의도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를 활용했다. ‘중복 좌파’가 핵심적인 희생양이었고, 성소수자 혐오도 눈에 띄게 강화됐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성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혐’ 문화가 심화됐다. 물론 혐오의 정치에 맞선 투쟁들이 벌어졌다. 성소수자들은 혐오 선동에 맞서 인권의 원칙을 요구하며 싸웠고,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기점으로 성차별적 사회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도 반영됐다. 운동 안에 존재하는 소수자 혐오적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평등한 집회를 위한 발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차별과 혐오는 잘못됐다는 선언이나 개개인의 차별적 표현과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을 통해 차별과 혐오에 맞설 수 있을까? 인권운동이 그저 정치적 올바름의 선생님이로 자신을 호출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는 누군가의 고민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소수자 운동은 지난 10년 동안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조직화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배제, 부정당하는 경험을 했다. 우익들은 성소수자들을 사회악으로 매도하며 성별 이분법과 그에 따른 고정관념, 보수적인 성관념과 가족 가치를 강화했다. ‘진보’, ‘개혁’ 인사라고 불리는 정치인들도 이런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공공연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후퇴의 시대였다. 그 과정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배운 것이 있다면, ‘정치적 올바름’ 자체가 세력 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성소수자가 차별받는다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집단이라고 전제하는 정치적 올바름은 성립되지 않는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시도에 맞서 소수자 집단이 저항하고 싸우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만다.

성소수자 운동은 또한 혐오가 단순한 무지나 편견의 발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성소수자들이 더 많이 커밍아웃하고, 대중의 인식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차별은 심화했기 때문이다. 혐오 선동 세력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자유주의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소수자 혐오를 활용했다.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소수자의 삶만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해악을 이해할 때 소수자 혐오에 맞선 싸움이 광범한 운동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소수자를 타자화하는 방식을 넘어서지 않고 소수자 혐오에 맞설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은 지난 10년간의 혐오에 맞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 박근혜 퇴진은 성소수자 운동의 요구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일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성소수자로서의 요구다. 박근혜 정권은 일관되게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했고, 혐오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수년 동안 성소수자 운동은 혐오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자유주의 정치인들에 맞서 왔는데 이 구도 또한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들은 여전히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공약하지 않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조직하고 지원하고 있는 한기총, 한교연 같은 보수 개신교 세력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은 정말 중요한데, '적폐'를 청산할 -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회복 또는 진전시킬 - 의지와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규모 거리 집회는 대중의 엄청난 자발성과 분노, 변화에의 열망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 열어놓은 기회의 공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공간 속에서 동성애 처벌법인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 서명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호응을 얻었고, 수십 만 명 앞에서 성소수자가 연단에 설 수 있었다. 또 퇴진 운동의 여파 속에서 성소수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는데, 의미심장하게도 항의 행동 와중에 청중석에서 나온 '나중에'라는 연호에 '지금 당장'이라고 응수했고 이 슬로건은 많은 이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은 이제 주요한 사회 의제이자 대선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소수자 운동은 촛불이 열어놓은 공간 속에서 한국 사회 변화의 방향에 개입해야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성소수자 운동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며 성소수자 인권이 한국 사회 변화의 주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의 운동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가시화하는 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 여성운동도 페미니즘의 대중화에 힘입어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고, 성평등을 둘러싼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혐오는 불평등한 체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명제에 등장하는 그 '인간'은 언제나 상상 속의 '인간성'을 표상했고 권리를 누릴 자격 기준을 내포한 개념이었다. 그 기준에 도전하며 '인간'의 협소한 개념을 실재하는 구체적 삶들로 확장해 온 것이 (인권)운동이다. 운동 안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적 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이 울퉁불퉁한 광장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장 안에 존재하는 혐오에 도전하는 과정은 사회에 만연한 혐오에 도전하는 과정의 일부여야 한다.

혐오를 드러내고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억압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건 차별이야.', '그게 바로 혐오표현이야.'라는 문제제기는 정치적 올바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차별과 혐오가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은 차별과 혐오가 사회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어떻게 불평등과 불의를 심화시키는지, 소수자 혐오와 억압이 왜 모두의 권리와 연결되는지에 관

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이 과정은 소수자 집단/운동 안과 밖의 논쟁이 아니다. 소수자 집단과 운동 내부에도 차별과 혐오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항할지를 둘러싼 이견과 논쟁이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의 발로나 무지와 편견의 결과가 아니다.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의 일환인 것이다. 박근혜 체제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지배자들은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거추장스러워하면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며 대다수의 희생과 굴종을 강요해 왔다.

운동은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켜내야 한다. ‘인권’은 이를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인권이 이미 합의된 원칙이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근거이자 힘으로서, 인권‘운동’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희망할수록 절망하였던 시대, 촛불은 무엇이었나?

서창호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한 사회의 경계는 극단적 사건에서 나타난다. 그 동안 한 사회나 한 시대가 감추려고 하고, 구성원들이 잘 감지하지 못 했던 사회의 심연은 ‘극단적인 사건’, ‘지극히 개별적인 사건’으로써 치부를 드러낸다. 한 철학자는 극단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은 사회전체를 드러내 주는 조명탄과 같다. 한 사회의 인문학적 성숙도(사회운동의 존재)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 환원해버리는지, 아니면 사회를 성찰하려는 실마리로 이어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엄기호

1. 촛불이전에 우리가 목도한 것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한 인권활동가의 한국사회에 대한 질문

:“도대체 시민들은 얼마나 이 폭력을 용인할 것인가?”, 공고한 의도적 침묵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박근혜 정권의 탄생

:TK라는 성격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동의하였던 대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월호, 사드(서문시장 화재사건)에 대한 공고한 진영의 논리

:공감의 단절, 보편적 공감보다는 혐오 그리고 결국 이를 뒷받침하였던 ‘기대없는 생존의 사회’

2. 촛불이 사회운동에게 던져준 것

-대중은 이토록 분노하고 절망하였음에도, 대중은 사회운동을 ‘왜’ 호명하지 않았는가?

:대중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또 침잠하는가?

:그 사이에 사회운동은 스스로 단선적 정치화에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기능적 실무적 운동이 중심에 이루고 있는 오늘의 사회운동의 부끄러움

:촛불이전과 촛불이후에도 그러할 그 ‘전문화’는 조직은 생존할지언정..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업계획’은 사회와 어떻게 조응하는가?

-촛불의 성과로 사회 현안 논의는 가능할 것이나 진영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우세력의 정치화는 훨씬 공고화할 것이며 사회현안마다 진영의 논리로 가를 것

:혐오세력이라는 것으로 쉽게 넘을 수 없는 사회정치적 공간(세대, 소통, 문화, 소외), 세계적 극우세력을 준동의 흐름과 궤를 함께하는 측면

:인권운동은 진영의 논리를 반차별, 권리라는 개념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의 언어는 좀 더 풍부해져야하지 않을까? 삶의 언어에서 어떻게 건너 올릴까?

3. 다시, (인권)운동

-광장의 촛불은 '역사적' 소멸을 예비하고 있다.

:뜨거웠던 광장의 열기는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개인과 개인의 SNS가 중심이 되었던 촛불이 '그들의 정치'가 아닌 '삶의 정치'이기 위한 사회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삶의 촛불은 없는가?

:수많은 개별적 사건을 해석하고 개입하는 힘, 이전에 계층, 세대 지역사회의 현안에 주목하고 성찰하는 노력과 의지

: 지역과 인권, 인권은 진영을 어떻게 다시 재구성 할 것인가?